

국민개헌 vs 사회주의 개헌...여야 프레임 전쟁

개헌 방향 부각해 여론 선점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력

개헌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의 개헌 '프레임 전쟁'이 불 붙고 있다.

개헌의 의미를 한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 각 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상대 당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임 전쟁은 실질적인 대국민 여론전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의 주도권이 달린 것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 개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등을 반영키로 하고 이번 개헌이 '촛불 혁명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빗대 '호헌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의 뿌리가 이른바 군사정권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개헌 논의의 구도를 '개헌 대 반개헌' 또는 '개헌 대 호헌'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에 대



민주당 개헌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제윤경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의 개헌 목적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와해된 보수진영을 다시 결집해 한국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당은 '관제 개헌 반대, 국민 개헌 찬성'을 캐치프레이

즈를 내걸고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는 '반(反)개헌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자제 스케줄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으로 민주당과 한국

당의 개헌 입장을 문제 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강조하는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당 이후에도 미래당과 민평당은 개헌 시기는 민주당,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한국당을 선택하면서 캐스팅 보트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차기 당권주자 하마평 무성

8월 전당대회...송영길·이종걸·김두관 등 물밑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전자들에게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차기 당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이끄는 동시에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일부 도전자들은 벌써 물밑 움직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하는 등 지지세 확장 경쟁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는 광주·전남 출신의 송영길 의원과 이종걸·김두관 의원 등이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 지난 전대에서 뜻밖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를 당

한 송 의원은 재도전 의사를 굳히고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입자 중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조용히 찾아다니며 경선 출마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국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등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정치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원외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권을 장악한 뒤 정국을 주도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당내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서울시장 경선 대진표 윤곽

박원순 시장 비롯 박영선·민병두·이상호·전현희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윤곽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영선·민병두·이상호·전현희 의원 등 5명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한때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정중래 전 의원은 이달 초 경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먼저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서울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미래전략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이상호 의원은 지난달 21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오늘부터 대정부질문...개헌·평창 격돌 예고

7일까지...사법개혁·암호화폐 등 쟁점 현안 줄이어

여야가 이번 주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5~7일)에서 격돌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성과가 설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최정호 공격수를 출격시켜 개헌과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5일 오후 2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당도 발목잡기식 반대가 아닌 민생법안 협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부각하는 한편 일방 독주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2차례 의총을 통해 개헌 당론을 마련한 기세를 몰아 이번 대정부질문을 '국민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고리로 개헌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양꼬없는 전뺑'이라

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될 소재로 꼽히며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도 여야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가상화폐 대책 혼선,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조목조목 따질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송기석 8일 대법 선고

국민의당 박준영 (영암·무안·신안)·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8일로 확정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에서 열린다. 또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송기석 의원의 선거캠프 책임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선고에서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가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박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과 송 의원 지역구 광주 서구갑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장 6억6400·전남지사 13억2200만원

선관위 6·13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 한도액 확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13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광주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 6억64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1억9900만원, 서구청장 1억7600만원, 남구청장 1억5600만원, 동구청장 1억2700만원 순이다.

또 지역구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994만원가량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구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284

만원과 5220만원 내외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남도지사과 전남도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은 13억2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5700만원(4.1%) 감소한 금액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주시장 선거가 1억8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 선거로 1억800만원이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500만원이었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평균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실용음악학과	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0	
		평생교육학과(M.Ed.)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학과(M.A.)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